

초대의 말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주위의 나무잎들이 색깔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0주년·법교육지원법 제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하러 합니다. 관심 있는 학회 회원님 여러분과 현장 교사, 국가 업무 담당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우리 학회의 창립 10주년과 법교육지원법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한국 법교육을 회고하고 전망하는 장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18. 11. 3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박 용 조** 올림

2008년 9월	학회 창립 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 개최(주제: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교육, 인권교육)
2008년 12월	2008 동계(통산 2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최근 동향)
2009년 4월	2009 춘계(통산 3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
2009년 10월	2009 연차(통산 4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법치주의와 학교 법교육의 과제1)
2009년 12월	2009 동계(통산 5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
2010년 5월	2010 춘계(통산 6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과 인권교육 교재개발방향)
2010년 10월	2010 연차(통산 7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인권보호 입법과 법, 인권교육의 방향)
2010년 12월	2010 동계(통산 8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실질적인 학교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과 실천 전략)
2011년 5월	2011 춘계(통산 9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
2011년 10월	2011 연차(통산 10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방안)
2011년 12월	2011 동계(통산 11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학생 자치 법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제도화 방안)
2012년 5월	2012 춘계(통산 12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학교폭력 근절 위한 당사자 역할과 소수자의 법·인권교육적 접근)
2012년 9월	2012 연차(통산 13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법교육학과 인권교육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2012년 12월	2012 동계(통산 14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법교육학과 인권교육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2013년 6월	2013 춘계(통산 15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3년 10월	2013 연차(통산 16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
2014년 1월	2013 동계(통산 17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4년 6월	2014 춘계(통산 18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법교육학과 인권교육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2014년 11월	2014 연차(통산 19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5년 5월	2015 춘계(통산 20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학생의 안전권과 안전교육 : 현황과 과제)
2015년 11월	2015 연차(통산 21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법·인권교육 관점에서 본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
2016년 5월	2016 춘계(통산 22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난민의 실태현황과 법·인권교육적 과제)
2016년 12월	2016 연차(통산 23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주제: 돌봄서비스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2017년 5월	2017 춘계(통산 24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법교육의 쟁점과 과제)
2017년 10월	2017 연차(통산 25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다문화 교육, 인권을 만나다)
2018년 5월	2018 춘계(통산 26차)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주제: 분야별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임원명단

직책	명단
명예회장	이기수(前 고려대 총장)
고문	강인수(前 수원대 부총장), 김범주(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오주언(前 자녀안심재단), 이양희(성균관대), 표시열(고려대 명예교수), 허종렬(서울교대), 박인현(대구교대), 최윤진(중앙대 명예교수)
회장	박용조(진주교대)
부회장	김영윤(前 압구정고등학교),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나달숙(백석대, 수석부회장), 성위석(경북대), 이동걸(경북교육청 장학관),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이종근(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한태(원광디지털대), 하윤수(부산교대), 두오균(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광식(국방연구원), 류호두(한국교원보호연구소)
감사	윤성철(변호사), 문종국(前 서울영풍초등학교장)
위원회	[편집위원장] 박용조(진주교대)
	[학술지평가위원장] 나달숙(백석대)
	[윤리위원장] 이종근(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연구위원장] 성위석(경북대)
	[대외협력위원장] 채한태(원광디지털대)
집행이사	[학술이사] 전제철(부산교대), 강일신(헌법재판책임연구원)
	[출판이사] 정필운(한국교원대), 김광병(청운대학교)
	[연구이사] 이대성(경기도교육청), 정상우(인하대학교), 김갑석(대구대학교)
	[기획이사] 박상준(전주교대), 윤수정(공주대학교)
	[국제·홍보이사] 장원순(공주교대), 조진우(도로교통연구원)
사무국	[총무이사] 이지혜(서울교대)
	[홍보이사] 배유진(사회보장정보원), 손진희(송실사이버대학교)
	[편집국] 전윤경(북원여고), 이경진(종촌중학교)

학 회 가 입 안 내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 652 592047 예금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연 회 비

기관회원 5만원 일반회원 3만원 이사회비 10만원

홈페이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http://www.khlea.org>)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30 ~ 14:00	접수
14:00 ~ 14:10	개회식 사회: 이지혜 (서울교대 교수, 총무이사) 개회사: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학회장) 축사: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14:10 ~ 14:50	기조발제 발제자: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회 고문) 법교육·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학문적 정체성·통합성·확장성의 지향 -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
14:50 ~ 15:00	기념 촬영
15:00 ~ 16:00	발제 1. 법교육지원법-현황과 전망 사회: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발표자: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 토론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16:00 ~ 16:20	휴식
16:20 ~ 17:20	발제2.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사회: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발표자: 김갑석 (대구대 강사, 법학박사) 토론자: 배화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7:20 ~ 18:00	종합토론: 한국 법교육의 나아갈 길 사회: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토론자: 발표자와 토론자 최윤진 (중앙대 명예교수, 전 법교육위원회 위원), 나달숙 (백석대 교수) 이지혜 (서울교대 교수) 이대성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교육학박사) 전윤경 (북원여고 교사, 교육학박사)
18:00 ~ 18:30	폐회 및 총회
18:30	저녁 식사

● ● 목 차 ● ●

< 초대의 말씀 >

초대의 말씀박용조

< 기조발제 >

법교육 · 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학문적 정체성 · 통합성 · 확장성의 지향
-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
.....허종렬(1)

< 주제 발표 및 토론 >

[발제 1] 법교육지원법-현황과 전망
.....김현철(29)
[발제 2]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김갑석(51)

● ● 기조발제 ● ●

**법교육 · 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학문적 정체성 · 통합성 · 확장성의 지향**
—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

[기조발제]

**법교육·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학문적
정체성·통합성·확장성의 지향**

-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법학박사, 학회 고문)

I. 머리말

1. 발제의 취지와 목적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가 2008년 9월 6일 창립된 후 2018년 11월 3일 현재 벌써 올해로 10주년을 맞아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학술발표회에 기조발제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

오늘 필자가 준비한 발제 논문의 주제는 본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법교육·인권교육연구의 동향과 학문적 정체성과 통합성·확장성의 지향 -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이다.

본래 필자가 기조발제 요청을 받고 처음 구상한 주제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의 지난 10년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과 인권교육 연구 동향 분석”이다. 필자는 이 주제 하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연구 동향이라 하여 학회지의 통권 확인, 투고 건수, 투고 저자 현황, 연구방법론 유형 분석,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등의 내용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작업 도중에 이렇게만 해서서는 아무런 이슈도 없이 평범한 기술(記述)에 그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거듭 원고 내용을 음미하던 중에 필자에게 부각된 것이 학회지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통합성, 확장성을 거론할 필요성을 느꼈다.

법과인권교육연구에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아닌 것들이 있어 학문적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접하면서 그 확장성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우리 학회의 본질적 과제인 법교육과 인권교육

4 · 법교육지원법 제정 10년: 회고와 전망

의 관계 여하와 양자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통합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 발제의 최종 제목을 위와 같이 정하게 된 취지이다.

돌이켜보면 ‘법과인권교육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실적을 쌓아 왔다. ‘법과인권교육연구’는 2008년 12월 30일 제1권 제1호로 창간된 이래 매년 3권씩 출간되어 2018년 8월 30일 현재 30권에 이른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진전시켜준 것은 특히 이 법과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이다. ‘법과인권교육연구’는 창립 3년 반 만인 2012년 3월 27일 등재후보지 선정¹⁾, 2014년 3월 제3대 박인현 회장 집행부의 등재후보지 유지 판정, 2015년 7월 6일 최윤진 4대 회장 집행부의 등재지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법과인권교육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의한 학회지 평가 역사 속에서 사실상 최단기간 내에 등재지에 선정되는 성취를 이루었다.²⁾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논의를 계기로 본 학회지가 한층 더 전문성을 갖추어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접근방법과 제한점

법과인권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간행 실적 분석, 논문 저자의 유형적 분석과 함께 게재 논문에 적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분석과 그 논문이 다룬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이라는 작업을 수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법과인권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171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나름의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 하되,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통합성·학

- 1) 이때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해 필자가 회장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한 글이 새삼 떠오른다 : “학회 창립한 지 3년 만에 최단 시일 내에 재심을 통과한 것은 우리 학회의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자축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초대 편집위원장을 자임하신 최윤진 교수님과 현재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수고해 주고 계시는 이명준 박사님, 초대 출판이사 이현수 교수님과 초대 간사인 김윤나 교수님, 학회지 창간 초기부터 일이 가능하도록 성의를 다 해 실무를 챙겨준 이지혜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창립 초기부터 학술지 업무와 함께 학술지평가준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나달숙 교수님과 준비 위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출판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재심 과정 등에서 애를 써주신 정순원 출판이사과 전윤경 간사께도 감사드립니다.” 2012. 3. 29, 필자가 당시 홍보를 담당한 이선영 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참조.
- 2) 금년에도 박용조 제5대 회장 집행부가 편집위원회와 학술지평가준비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등재지 유지 평가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으며, 박용조 회장 겸 편집위원장과 정필운 편집부위원장 및 이경진 편집간사, 나달숙 수석 부회장겸 학술지평가대책위원장과 배유진 간사 등의 노고에 회원 중의 일원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장성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아울러 특히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양자의 통합성을 논함에
서 필요한 것이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두 교육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논의이
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서 필자가 이미 법과인권교육연구, 2009년 4월 제2권
제1호에 게재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 하의 논의를 활용
하고자 한다.

한편 모든 연구는 그 접근 방법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본고에서도 이러
한 시도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예상된다. 첫째, 법과인권교육연구동향을 분석
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로써 학회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
당한 접근인가 하는 질문이다. 생각건대, 사례로서의 본 학회활동에 대한 분석
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회 활동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 기간
동안의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여타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들의 연구동향까지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학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학회 활동
전반에 걸친 연구 성과 분석에 갈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본래 학회 연
구동향을 돌아보려면 학회지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학술발표회의 내용도 같이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이 점에서 오
늘 발제는 제한적이다. 필자는 양자의 연구 성과를 분리하여 본고에서 학회지
분석만을 다룬다. 본 학회 학술발표회의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은 본 분석에 이
어서 본 학회 회원 중 누군가 자임하여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컨대, 본 학회지 연구동향 논의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
에 하나의 방향타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학회가 한층 더 우리
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하에서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의의 및 양자의 관계를 간단히 본다.

3) 또한 학술발표회의 경우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학회 창립 일에 첫
학술발표회를 한 이후 2018년 11월 3일 현재까지, 총 27차에 걸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조명해온 바 있다. 본 학회가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양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법교육과 인권교육 사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학회 창립의 기본 정신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 구현”을 표방하였기 때
문이다. 신생 학회로써 여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공적으로 학술지를 간행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창립 취지에 공감하여 학회의 사회적 위상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 역대 집행부의 희생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Ⅱ. 이론적 배경 :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의의 및 양자의 관계

미국에서 법교육이란 일반인에게 법, 법절차, 법제도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그것들이 바탕이 되는 근본 원리들과 가치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교육이다(1978년의 미국 법교육법).⁴⁾ 미국 변호사협회는 법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ABA, 1978 : 37).

법교육은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 이해, 기능, 태도와 평가력을 개발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경험이다

법교육에서는 단지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개인 상호간 혹은 개인과 집단 상호간 혹은 집단 상호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법교육은 법률 생활과 관련된 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며, 의사 소통과 사회 참여의 기능을 교육하고, 입헌주의 신념과 민주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정부도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은 법률적 지식의 습득, 법적 문제와 쟁점의 합리적 해결 능력, 정의 실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 생활에 참여하는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1997: 200).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허종렬 외, 2008 : 53).

지식 목표 : 규칙과 법의 필요성 인식. 법의 기초 개념과 법적 지식 이해 증진.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인식. 헌법의 이해 증진.

기능 목표 : 법적 갈등 상황 분석, 법적 사고력 배양. 법적 절차에 필요한 능력 신장

가치·태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식, 법적 권위 존중,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법체계 개선을 위한 참여 태도 형성.

4) 이하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는 허종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호(2009.4), 73-81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한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유엔이 인권교육을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 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본다(UN, 2004; 이종태 외, 2005: 42). 위의 유엔의 공식적인 정의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권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도 보인다. 예컨대, 구정화 등은 인권교육을 “인권을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구정화 · 송현정 · 설규주, 2004). 또 Lister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고 요약하고 있다(Lister, 1984 ; 이종태 외, 2005, 43). 한편 인권교육실천가들의 개념 논의는 그들이 중점을 두는 영역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종태 등은 “인권교육을 하나의 개념 정의로 담아내는 것은 인권교육을 박제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이종태 외, 2005 : 54), 그 개념의 중요한 의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 학습자의 인권사태와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인권교육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는 점, 인권친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장한다는 점,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며, 인권 감수성의 고취를 강조한다는 점도 그 의미요소라고 한다(이종태 외, 2005: 54-58).

그 결과 인권교육은 그 방법론과 내용론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종태 등에 따르면 인권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권교육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적, 학교 중심적, 교과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은 학생 참여적, 현장문제 중심적, 활동 중심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이종태 외, 2005:75). 그 결과 인권교육론자들은 현재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것인지 혹은 본래의 비판적 성격을 유지할 것인지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분석이다(이종태 외, 2005:77).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 모든 국민과 원주민, 상이한 인종, 국가, 민족, 언어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양성 평등, 우애 증진, 평화의 건설과 관리, 인간 중심

8 · 법교육지원법 제정 10년: 회고와 전망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 증진 등을 중시하고 이를 지향한다(유엔 2004, 이종태 외, 2005: 42)

위에서도 보았지만 인권교육은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법을 통해서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국제인권규약도 그것의 성격은 법규범이다. 아울러 국제인권법만 인권장전이 아니라 국내 헌법과 관련 법률들도 인권장전이다. 한편 법교육도 그 내용은 겉으로는 법과 법제도라고 하는 틀로 치장되어 있자만 결국 인권과 그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제도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인권교육이라 할 만하다.

흔히들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다른 점으로 전자는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후자는 오히려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양자는 서로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평소 진정한 준법교육은 그것이 바로 인권교육이라고 말한다. 준법의 정신은 나의 인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준법 교육이 이렇게 인식될 때 우리가 왜 준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 유발이 확실하게 되고 또 학습자들이 수긍을 하게 된다.

요건대 법교육은 법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종국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교육은 기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이종태 외, 2005 : 90-91). 법교육이 초점을 두고 있는 법적 지식과 법적 사고력,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도 현 상황에서 정의와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태 외, 2005 : 90-9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인권교육과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을 준거로 실정법을 판단하지만, 법교육은 실정법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이해와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이것은 법은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현행법 자체가 궁극적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따라서 인권교육의 측면에서는 현행법을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다

시 살펴보고 문제 제기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둘째, 위와 같은 연장선에서 인권교육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더 강조하지만, 법교육은 인권보장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법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며, 인권보장과 법적 안정성이 출동하는 경우 양자의 균형을 고려한다고 한다(이종태 외, 2005 : 90-91).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반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인권교육은 실정법을 판단하고, 법교육은 실정법 자체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법을 의무 본위보다 권리 본위로 생각하는 근대 법제에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둘째,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놓고 인권교육은 이것보다 인권을 더 중시한다고 하지만 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타인의 인권보장 등을 염두에 둔 또 다른 인권보장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방의 인권 보장 못지않게 상대방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안정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건대,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차이점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대상과 목적은 같다고 볼 것이며, 각각의 접근에서의 공통 부모를 찾아 이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대성, 2008 : 73).

Ⅲ. ‘법과인권교육연구’의 개괄적 성과와 과제

1. ‘법과인권교육연구’의 간행 및 논문 게재 실적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는 창간 첫째 12월에 1호를 간행한 이후 매년마다 3호씩 간행되고 있다. 통권과 전체 간행 호수 현황은 다음 <표 1> 과 같다. 이 표를 보면 2008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 모두 30권이 간행되었다.

〈 표 1 〉 법과인권교육연구 통권 현황

권 호	1	2	3	4	5	6	7	8	9	10	11	계	
1	o	o	o	o	o	o	o	o	o	o	o	11	30
2		o	o	o	o	o	o	o	o	o	o	10	
3		o	o	o	o	o	o	o	o	o		9	

법과인권교육연구는 2008년 12월 제1권에 5편의 논문을 처음 게재한 이후 1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171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권호별로 적게는 3편, 많게는 9편에 이르며,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면 중반기 이후부터 각 호당 논문 편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 〉 법과인권교육연구 권호별 논문 편수

권 호	1	2	3	4	5	6	7	8	9	10	11	계
1	5	5	4	4	5	8	5	5	5	7	7	53
2		4	5	4	6	7	6	4	9	9	5	60
3		4	5	5	7	6	5	8	3	9		53
계	5	13	14	13	18	21	16	17	17	18	12	171

학회 회원의 규모에 비하여 간행횟수를 매년 3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과 외부 집필자의 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본 학회지가 단기간 내에 등재됨으로써 수요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 학회가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어느 한 쪽만을 다루지 않고 두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연 단위 간행 횟수를 1회 더 추가하여 연 4회 정도의 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싶다.

길다고 하면 길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협소한 연구 시장에서 이처럼 많은 논문이 본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본 학회 회원들의 성실한 연구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더욱 값진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결과물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12 · 법교육지원법 제정 10년: 회고와 전망

위의 표를 보면 사회과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가장 많다. 본 학회가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주로 연구하는 학회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과교육 전공자의 참여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주로 다루는 이 외에도 본 학회지 게재 학자들 가운데에는 유아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다문화교육, 사회학, 역사학, 교육과정 등의 제 분야에서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논문 게재자 중에 교육행정학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법 논문 게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둘째, 논문 게재자 중 법학 전공자들이 50명에 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법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본 학회지의 취지에 맞는 참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법교육과 인권교육 양자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법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적이다.

셋째, 청소년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참여 횟수가 예상보다 많다. 이것 역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주된 대상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면서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은 이보다 더 다양한 전공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학자, 철학자 등을 포함하여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문사회과학과 예체능 분야 전공자 등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나. 게재 논문 저자의 직업 분포와 과제

필자는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게재 논문 저자의 직업 분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5> 게재 논문 저자의 직업 분포

유형	교수		교원			정부기관·단체				대학원생	미상	계
	교수	강사(조교)	초	중	고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적십자	소녀원			
	128	4	20	3	26	13	3	1	1	17	4	230
	132		59			18				17	4	230

*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투고 당시 논문상의 직업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또는 재학중인 교원은 본인이 논문에 표시한 대로 분류함. 대부분 이 경우 현직 교사임을 표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직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확인도 불가능한 때에는 미상으로 처리함.

위의 표를 보면 첫째, 논문 게재자 중에는 대학 소속의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학 교수들은 연구가 본연의 의무인 사람들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학자로서의 소임으로 인하여 문제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사 집단이 대학 교직원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본 학회가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주로 연구하는 학회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원들의 연구는 교육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교원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진학을 염두에 둔 석사학위수료자들이라는 점도 그 이유가 된다. 이들은 현장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면서 다른 한편 이 분야 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많은 논문들을 게재한다. 본 학회의 경우 그동안 학회를 이끄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하면서도 실제 학회가 잘 운영되도록 뒷받침을 해온 사람들 중에 현직 교원들이 많다. 학회의 성격상 본연의 연구 업무를 교수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도 학계와 교육계의 두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현실 적합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교육이든 인권교육이든 그것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틀을 전제로 하는 한은 그 교육학이 경험 과학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 교원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 학회에 현장교원들이 참여해야 할 아주 긴요한 이유가 있다.

셋째, 한편 그것이 교육의 문제를 다룬다 하여 교수들과 교사들만으로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보다 다양한 직업군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학회지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스포츠나 연예계 계통에 종사하는 자들은 물론, 사회적 양자 또는 소수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특수교육 종사자나 다문화교육 종사자, 사회복지관계종사자, 교정관계 종사자 등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과인권교육연구 동향의 개괄적 분석을 종합하면 본 학회지는 지난 10년간 교육학 전공과 법학 전공은 물론 청소년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복지학, 사회학, 역사학,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교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총 11권 30호의 성실한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 분석을 통해 얻는 시사점으로는 앞으로 심리학, 철학은 물론

여타 사회과학 및 인문학이나 예체능 등을 전공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 본 연구테마는 기본적으로 교육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물론 현장 교사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V. 법과인권교육연구의 연구방법의 유형적 분포와 과제

1. 게재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론의 세분화 정도와 과제

필자는 차제에 지난 10년간 본 학회 게재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론의 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연구 논문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연구방법론이다. 결국 논문은 연구방법론이 그 질을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방법론을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론의 유형에 관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논의와 소개를 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체적으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들 특히 법 또는 인권을 다루거나 그것을 교육하는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론 연구의 경우 이것들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은 크게 대별하면 문헌연구, 비교연구, 개발연구, 실험연구, 조사 연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것들의 유형을 아래의 <표 6>에서 보듯이 본 학회지 분석에 적합하게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문헌연구의 경우에도 구체적 목적에 따른 추가적인 세분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표 6 >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론의 유형화

연구 방법	광의의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자료 분석)				
	협의의 문헌연구						비교연구		개발연구			조사방법		
구체 적 유형	현황 · 연구 동향 분석	교육 과정 · 교재 분석	개선 방안 · 과제 도출	법 해석 · 입법 정책	이 론 연구	국제비교 · 외국 사례	프로 그램 개발	교재 개발	수업지도안 · 프로그램 실행	직접 조사	설문 조사	간접 조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게재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대체로 현황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연구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 분석 결과 역시 문헌연구가 많고 그 중에 이 유형이 많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표에서 첫째, 문헌연구는 문헌 자체의 연구만으로 그 문헌들의 함의와 내용만을 분석하여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헌연구는 그것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현황 파악을 위주로 하고 그 파악한 결과에서 간단히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의 경향을 알아보는 방법, 주로 법령과 관련된 문헌들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 해석론을 개진하기 위한 것과 현행의 법제를 분석·비판하면서 새로운 입법정책을 제안하는 방법, 순수하게 관련 주제에 관해 그 이론을 주로 논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비교연구는 광의의 문헌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외국의 사례들을 파악함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거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것들을 병렬적으로 비교하거나 혹은 단지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개발연구 역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지도안, 교재개발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본고에서 개발연구 역시 광의의 문헌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특히 그 목적이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지도안 또는 수업지도안 등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실행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업지도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위의 문헌연구상의 개발연구와 목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의 실행 적용을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헌연구 상의 개발연구와 대비된다.

다섯째, 조사연구는 어떠한 궁금한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론으로서 그 목적과 방법에서 앞의 문헌연구는 물론 실험연구와 다르다. 조사연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직접 대상자를 면접하거나 관찰하는 등의 실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접 조사의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이에 답을 하도록 한 이후, 그 응답 내용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의 방법,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이미 해놓은 위의 직접조사나 설문조사의 결과 얻은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만을 함으로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간접 조사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그 조사결과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데이터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주로 데이터의 계량적 동향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의 방법과 대상자가 응답한 답변을 중심으로 그 성향을 파악해내는 질적 연구의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조사의 경우 질적 연구로 그 결과를 도출하며, 설문조사의 경우 양적 연구로 그 결과를 분석해낸다. 간접조사의 경우 그것이 간접적으로 얻은 데이터의 성격과 내용이 직접조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질적 연구 또는 양적 연구가 적용된다.

2. 연구방법론 분류에서 구별이 모호한 경우의 실제 판단

위와 같은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과인권교육연구’지에 적용된 각 논문들의 연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래에서 실제 판단을 할 때 적용한 몇 가지 기준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의 논문에서 문헌연구를 하면서 현황 및 연구동향 분석과 개선방안 또는 과제 도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 필자는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점과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즉,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하나의 논문이 개선방안과 과제 도출에도 해당되고 입법정책에도 해당되는 경우 법에 관한 것은 모두 입법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문헌연구에서 어떤 논문이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이국의 동향 또는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 본고에서는 이것을 국제비교나 외국사례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현황 및 연구동향 파악은 문헌 연구를 통한 현황 파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 비판 또는 방안 및 과제 도출은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현황 파악도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안 및 과제도출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자는 보통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현황보다 방안 및 과제 도출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발전방안은 이들의 인권보호가 취약하다고 하는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이것은 현황 및 연구 동향 파악인가 혹은 정책 비판과 방안 도출을 겸한 것인가? 그 논문이 다루는 내용의 비중에 따라 분류하였다.

여섯째, 현황 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의 파악

이라는 점에서 같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교육과정 및 교재 외에 예컨대,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등을 문헌을 위주로 파악하는 경우 전자로 분류하여 후자와 구별하였다.

다섯째, 현황 파악과 직접조사의 경우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자는 주로 문헌을 통한 파악을 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실제 직접적인 관련 자료를 면접 또는 관찰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조사하는 점이다.

넷째, 개발연구도 그것이 실행을 거치지 않고 문헌연구와 내용분석만을 거친 경우에는 실은 크게 보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의의 문헌연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예를 들어 심한결·홍미화, 2018.8.30. : 85 이하). 그러나 구체적인 분류에서는 이것을 따로 개발연구라 하여 구분하였다.

일곱째, 직접조사는 직접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교대생이 수업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직접 조사로 분류하였다(홍미화, 2014.8.30. :133 이하).

여덟째, 직접조사와 설문조사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점에서 같지만 조사방법이 다르다. 즉, 직접 조사는 실태 규명을 위해 조사자가 원자료를 직접 구하는 것이고, 설문조사는 당사자들의 실태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취한다. 직접 조사가 설문조사를 겸한 경우에는 이것을 아홉째, 직접조사로 분류하였다(김윤나, 2014.12.30.:21 이하).

열번째, 간접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설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나 기관이 이미 해놓은 직접 조사 또는 설문 조사의 결과 나온 데이터를 입수해서 분석하는 것이다(정상우·강은영, 2017,8,30: 175 이하).

3.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적용된 논문들의 실제 연구방법 유형 분포와 과제

위와 같은 연구방법론의 개념화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법과인권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적용된 연구방법론의 분포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 표 7 〉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 유형 빈도 분석

연구 방법	광의의 문헌연구								실행 연구	조사연구(자료 분석)					합계				
	협의의 문헌연구					비교 연구	개발연구												
구체 적 유형	현 황 · 연구 동향 분석	교육 과정 · 교재 분석	개선 방안 · 과제 도출	법 해석 · 입법 정책	이론 연구					국제 비교 · 외국 사례	프로 그램 · 개발	교재 개발	수업 지도 안 · 프로 그램 실행	조사방법			자료 분석		
														직접 조사		설문 조사	간접 조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전체 논문 적용 횟수	13	21	41	16	13	11	6	3	9	10	26	1	10	27	205				
	89																		
	102																		
122									9	37			37						

위의 표를 보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논문 중에 문헌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 가장 많다. 전체 186편의 논문 중 110여편에 이른다.

문헌연구 가운데에는 개선방안 제안과 과제 도출이 가장 많다. 실천을 위한 성격이 강한 연구들이다. 같은 성격의 현황 및 연구동향 파악에 관한 것도 많다. 대상이 다를 뿐 역시 실천적 연구인 교육과정 및 교재분석을 다룬 논문들도 많다.

법해석이나 입법정책을 다룬 것이 많은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본 학회지가 실제로는 법 자체 또는 인권 자체를 다룬 논문들도 게재를 허용한 까닭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큰 틀에서 입법정책을 다룬 논문들도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비교나 외국사례를 연구한 경우도 많다. 이 논문들을 합치면 모두 91편에 이른다. 전체연구의 반에 해당된다. 법교육 및 인권교육에 관한 이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예상보다 아주 적다. 법과인권교육론이 발전하려면 이론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헌연구 다음으로 많은 것은 조사연구이다. 조사연구 중엔 설문조사 분석을 한 것이 가장 많다. 자연스럽게 양적 연구가 많다. 물론 직접 면접이나 관찰 등의 조사를 거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도 눈에 띈다. 조사 연구 또한 실천연구라 할 것이다.

본 현황표에서 프로그램 또는 교재개발을 한 것과 수업지도안 도출을 위한

실행 연구도 많다. 이것은 본 학회지가 학교현장의 법교육 인권교육인 것과 관련이 있다.

V. 게재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과제

1. 연구 주제와 내용 분석의 의미

필자는 ‘법과인권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 영역들을 크게 법교육과 인권교육, 양자의 통합적 접근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영역을 다시 게재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에서 통합적 접근이라 함은 한 논문에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함께 다루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각 주제들의 세부적 분류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유의하고자 한 점이 있다. 요컨대, 이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가 편의적으로 시도한 분류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놓고서도 사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점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분류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교육 연구의 경우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교육 방법을 논하면서 미국의 청소년자치법정 운영사례의 효과분석을 참고하는 연구의 경우, 학교폭력 법교육인 동시에 비교교육연구에 해당된다. 사회과 법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우 이 논문은 교육과정 논문으로도 분류되고, 교재 관련 논문으로도 분류된다. 인권교육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경우, 청소년과 외국 비교연구에 동시 분류된다.

2. 법교육 관련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과제

가. 법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분포와 과제

법교육을 다룬 논문의 주제들을 구체적인 소주제별로 <표 8> 과 같이 세분화해보았다. 그 결과 법 또는 법학 자체를 다룬 것부터 학교 법교육, 청소년 법교육, 성인 법교육 등의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법교육론이 연구되고 있었다.

〈 표 8 〉 법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게재 분포

영역	법학		법교육																				연구동향										
			학교 법교육												청소년 법교육				대학	성인 법교육													
소주제	교육법	안전법·아동청소년법	법교육 교육과정										외국 법교육·비교연구	법교육 교사 양성·연수	법의식	소수자	비행 청소년	법교육 방법	기타	법학 교육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민 참여 법교육	법교육 연구동향	합계									
			교육과정 구성, 개정	목적·목표·성격	내용						방법	평가																					
					일반	헌법	안전교육	학교폭력	선거교육	다문화															인성교육								
게재분포	18	4	1	2	3	13	3	4	4	1	2	6	1	6	1	1	1	1	1	1	1	1	1	1	1	1	1	3	4	1	1	3	86
	22		30												6	1	1	7					2										
			40												6	1	1						2										
			48																														
22		61																											3				

위의 표를 보면 법 또는 법학 자체를 다룬 논문의 게재 건수가 22건에 이른다. 법교육 관련 논문 86편중 22편에 이른다. 이 주제들은 다시 교육인권과 교육법을 주제로 다룬 것, 권리로서의 안전권과 안전관계법을 다룬 것이 있다.

또한 학교법교육을 다룬 논문은 48편에 이른다. 법교육 교육과정을 다룬 것, 법 교육과정 내의 법교육 목적과 목표, 법교육의 성격, 법교육의 내용, 법교육 방법 및 평가를 다룬 것들과 법교육 교재, 법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외국 법교육을 다룬 것들과 우리나라와 비교연구를 한 것 등이 있었다. 표를 보면 가장 연구가 많은 것이 학교법교육에 관한 논문들이다. 법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들을 골고루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최근의 학교현장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교육,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권리에 상응한 책임교육,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헌법교육에 관한 논문들의 빈도가 현저히 높다. 이것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강조한 이른바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반영한 것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한 것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본 학회지는 법교육연구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창간된 만큼 학교 법교육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며, 예상한 결과이다.

본 학회지에서 청소년 법교육 관련 논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법의식을 다룬 것들과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가정 또래집단의 존중 등을 가르치는 소수자 존중 법교육,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법교육, 청소년 법교육방법 등을 다룬 것들이 보인다.

성인 법교육 관련 논문들도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법교육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법교육론이 보인다. 오늘 필자의 경우처럼 법교육 연구동향 자체를 다룬 논문들도 보인다.

나. 법교육연구의 정체성과 교육법 연구

위의 논문 주제 및 내용 분석에서 교육법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보인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법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주로 표방한 본 학회지에 교육법 논문이 예상보다 많은 것은 세 가지 중 한 가지 판단 때문이 임의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첫째는 교육법 관련 논의 내용들도 예컨대 교사들에게 교육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양성기관이나 연수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전제할 때 충분히 법교육의 내용으로 다룰 만 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교육법과 법교육의 구분을 못하는 소치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자를 구분하면서도 교육법 논문을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교육법 그 자체를 다루면서 이것이 저절로 법교육의 내용 또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판단이 짧은 것이다. 법교육의 경우 법을 가르치려면 그것의 교재화라고 하는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결국 필자는 교육법을 다루는 논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논문이 교육법을 다루는 취지와 목적이 교육법을 통해 교육의 영역에서 당사자 상호간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도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이것은 교육법 논문으로 교육법학을 주로 하는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그 논문이 같은 교육법을 다루더라도 교육법관계상의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을 학교교육 또는 청소년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다루기 위한 교재화 관점에서 해부하고 논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법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본 학회지의 법교육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교육법 내용을 포함한 논문일 경우

편집진은 이 양자를 잘 구분하여 심사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 이 점이 모호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 아울러 교육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 영역의 경우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 학회지에 어떤 논문이 헌법을 다루되 그 논문의 목적이 사례 또는 판례를 통해 다툼이 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관계를 해석하는 법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은 헌법학 관련 학회지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같은 헌법 판례를 다루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헌법상의 당사자관계나 권리·의무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이른바 교과교육학의 내용의 선정 조직의 관점에서 다루거나 교재화 또는 교재 개발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라면, 이것은 법교육 논문으로 당연히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유의 경우 법교육과 교육법이 전혀 다른 학문임을 분별하여야 한다. 교육법은 법학의 한 분야이고 법교육은 교육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본 학회지는 교육학 측면에서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다루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곧 본 학회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나아가 학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교육과 교육법의 이러한 차이를 혼동하거나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서로 유의하여 본 학회가 어디까지나 법교육을 다루는 학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사유의 경우 이것은 법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양하는 것이 좋다.

3. 인권교육 관련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과제

가. 인권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분포

인권교육을 다룬 논문의 주제들도 구체적인 소주제별로 세분화해보았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 아래 <표 9> 이다. 이 표에는 인권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분포가 드러나 있다. 이 표를 보면 인권 자체를 다룬 것부터 학교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성인 인권교육 등의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론이 연구되었다.

〈표 9〉 인권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빈도 분포

영역	인권교육																							합계																																																							
	인권 일반					학교 인권교육										청소년	대학	성인인권교육																																																													
소주제	학생	청소	주자	난민	아동	다문화사	스포츠권	인권교육 교육과정										인권	외국	인권교육제도화	인권	둘봄서비스	소년법	대학생	공무원	세계화시대시민교육	난민이주자탈북자	평생학습도시																																																			
								교육과정개정	목적·목표·성격·효과·과	내용					인권교육평가	인권교육방법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교육과정개정	목적·목표·성격·효과·과	인권교육평가	인권교육방법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교육과정개정	목적·목표·성격·효과·과	인권교육평가	인권교육방법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인권교육제도화
15	8	5	2	3	1			3	4			2	2	6	1	1	10	5	1	1			4	3	1	5	1	1	1	1	1	1	4	2	3	10																																											
								25																																																																							
								39																																																																							
								47																																																																							
34								64										7				1				9				3																																																	

나. 인권교육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분포와 과제

위의 표 내용 중 인권일반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생·청소년 인권 자체를 다룬 논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다룬 수편의 논문들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을 다룬 것이 10여 편이 넘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또한 이주자, 난민, 탈북자의 인권을 다룬 논문들이 많은 점도 고무적이다. 우리 학회와 학회지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논의의 장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스포츠권에까지 관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풀이된다.

표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논문들이다. 인권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론에 들어가면 최근의 학교현장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문화인권교육, 인권감수성교육, 장애인 등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저작권교육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들의 빈도가 현저히 높다. 이것은 특히 최근 10여 년에 걸쳐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교육 교재 개발을 다룬 논문들도 자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대보다 다소 빈도가 저조한 것이 청소년 인권교육 관련 주제 논문들이다. 학회의 본래 취지가 그 교육론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때 권리 자체의 보장을 논하는 것이 고무적이라 하여, 정작 그것에 치우쳐 그 교육론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모양새가 다소 바뀌는 형국이라 생각한다. 청소년 인권교육론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다룬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결국 인권교육론은 그 대상의 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의에서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사회의 인권교육을 다룬 것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인권에 대한 소양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마지막 공교육의 장인 대학에서라도 인권교육을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학자들이 대학생을 성인으로 치부하여 그들의 인성 함양과 그 일환으로서의 인권소양교육에 소홀한 것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차제에 본 학회의 회원들의 이 분야에 대한 분발과 아울러 이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학회지가 성인인권교육론 연구에 관심을 보인 연구가 비교적 자주 눈에 띄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보통 교육이라 하게 되면 주로 학교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론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론이 다수 개진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 주제 영역의 소주제들 역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로 부각되고 있는 수용자 인권교육, 난민과 이주자 탈북자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결부된 인권교육, 평생학습도시 관련 인권교육을 다룬 것들이어서 역시 고무적이다.

다. 법과인권교육연구의 인권교육 관련 특징

본 학회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 그 자체를 다룬 논문들이 학교 인권교육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학회지가 단순한 법교육 학회지가 아니고 법과인권을 같이 다루는 학회지인 것의 긍정적 효과라 생각된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함께 논하기로 한 본 학회지의 취지에 비추어 인권 그 자체를 다룬 논문들이 많은 것은 이것을 간행하는 본 학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한다. 흔히들 교과교육이

라 하면 주로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적 입장에서 그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성격, 내용, 방법 및 평가를 다루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치부하고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내용학의 연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법교육만이 아니라 인권교육도 같이 다루기로 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법교육에서는 법 그 자체를 주제로 함은 물론, 인권교육에서는 인권 그 자체도 풍부히 다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것이 인권을 다루는 것이기에 논의의 영역과 대상의 확장성을 무궁무진하게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우리들의 논의 내용의 깊이도 학교 교육과정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바탕을 이루는 관련 사회과학의 최근 흐름까지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번의 본 학회지 분석 결과 특히 인권 그 자체를 다루는 논문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본 학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과제

여기에서 법교육과 인권교육 통합접근이라 함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의 하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교육과 인권교육 양자를 통합하여 다룬 것을 말한다. 논문 편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검토할 것이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와 양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점에서 관해서는 필자가 본 학회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선행연구가 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작성된 <표 10>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빈도 분포를 본다.

<표 10>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관련 논문들의 소주제별 빈도 분포

일반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학교									청소년		성인		기타		
	교육과정								교재	법과 인권 교육 현황	법의 식 인권 의식	탈북 청년 인권 교육	다문 화법 인권 교육	복합 이탈 주 민 법 인 권 교 육		사 회 교 육
	교육 과정 개 정	목 적 목 표	성 격	내 容			방 법	평 가								
				일반	소 수 자	학 교 폭 력										
1	1	0	1	1	2	0	0	2	1	2	1	3	1	2	19	
1	6															
	9										3		4		2	

이 표를 보면 우선 양자 통합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이 위의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독자적으로 다룬 논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게재된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 법교육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같이 거론하며 이것들이 모두 잘 반영되는 교육과정을 기대하는 논문과 소수자 보호나 학교폭력 예방 또는 치유 목적의 양자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논문, 청소년의 생활 개선을 위한 양자 통합적 접근, 탈북청소년과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양자 통합적 접근, 다문화가족을 위한 양자 통합적 접근 등이 있다.

VI. 맺음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하게 된 발제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본 발제의 취지는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일별하면서 생각하게 된 법교육·인권교육 연구의 정체성·확장성·통합성의 지향을 염두에 두고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법과인권교육연구의 성과를 개괄적 성과, 연구방법론의 유형적 분석, 연구 주제 및 내용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동향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에서 발제자는 간행 실적 분석, 논문 저자의 유형적 분석과 함께 게재 논문에 적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분석과 그 논문이 다룬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이라는 작업을 수반하였다. 이를 위해 발제자는 구체적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 171편을 대상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본래 학회 연구동향을 돌아보려면 학회지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학회가 개최한 27차에 걸친 학술발표회의 내용들도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결과 학술발표회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의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오늘 발제는 제한적이다.

첫째, ‘법과인권교육연구’ 동향의 개괄적 분석을 종합하면, 본 학회지는 지난 10년간 교육학 전공과 법학 전공은 물론 청소년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사회복지학, 사회학, 역사학,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여기에 교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총 11권 30호의 성실한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 분석을 통해 얻는 시사점으로는 앞으로 위 전공자 외에도 심리학, 철학은 물론 여타 사회과학 및 인문학은 물론 예체능 등을 전공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

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체적으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들 특히 법 또는 인권을 다루거나 그것을 교육하는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론 연구의 경우, 이것들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은 크게 대별하면 문헌연구, 비교연구, 개발연구, 실행연구, 조사 연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 실제 게재 논문에 적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하였다. ‘법과인권교육연구’ 게재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문헌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실천연구는 많으나 이론 연구가 약하고, 국제비교나 외국사례의 연구 등 비교교육학적 연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셋째, 법교육 연구 또는 법교육학의 정체성에 비취 ‘법과인권교육연구’에 교육법 논문이 많았던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한 것이겠고 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앞으로 더욱 본 학회지의 정체성 나아가 본 학회와 법교육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인권교육 분야의 논문이 법교육 논문보다 많은 점은 고무적이다. 향후 인권교육이 가진 참여 범위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참여하는 저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함직하다.

다섯째,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연구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양자 통합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이 위의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독자적으로 다룬 논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게재율이 저조하였다. 소수자 보호나 학교폭력 예방 또는 치유 목적, 청소년의 생활 개선, 탈북청소년과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다문화가족을 위한 양자 통합적 접근 등을 다룬 논문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실질적 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상호간 통합적 접근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명숙(2012). 인권교육 연구 동향-최근 5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권(2008.12). pp. 1-14.
- 구정화·설규주·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김자영·곽한영(2017). 법교육 학술 연구 경향 분석. 법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17.4). pp. 23-48.
- 박상준(2013).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1호(2013.4). pp. 71-92.
- 이대성(2008). 중등학교에서 법과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권(2008.12). pp. 71-90.
- 이수정(2017). 우리나라 학교법교육 연구동향 분석-제7차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2017.8). pp. 23-40.
- 이종태 외(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 이지혜(2009). 인권교육 연구의 대상과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09). 인권교육 연구 동향분석-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호(2009.4). pp. 1-25.
- 허종렬(1991). “미국 법교육의 역사와 최근 동향.” 사회와 교육(한국사회과교육학회 논문집). pp. 89-110.
- 허종렬(2009).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호(2009.4). pp. 73-92.
- 法教育研究會(2005). はじめての法教育. ぎょうせい.
- ABA(1978). Law-Related Education : A Crucial Component of American Education. YEFC's Memorandum.
-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권 제1호(2008.12)부터 제11권 제2호(2018.8)까지의 171편 논문 초록 검토.

● ● 발제 1 ● ●

법교육지원법
-현황과 전망

[발제 1]

법 교육 지원 법

- 현황과 전망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행

주요 시기

- 2005년 이전 : 초·중·등 학교 법교육 중심의 법교육, 2003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 신설
- 2005년 이후 : 정부(법무부)가 법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 법교육 활동 시작
- 2008년 : 법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 법교육 제도 마련
- 2006년 한국법교육학회 창립, 2008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정부 주도 법교육

- 2004년 11월 법무부정책위원회 법교육 추진 결의
- 2005년 3월 법무부 법교육 사업 추진 발표(김승규 장관)
- 법교육연구위원회 출범(2005)
- 법교육추진기획단 (2005)
-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발간(2005)
- 자안심 재단 법교육 사업(2005), 한국법교육센터 설립(2006)

법무부 법교육 6대 연구 과제(2005)

-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 법조계, 법과대학등 법교육 지원방안
-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방안

법무부 법교육 추진 종합계획(2005)

- 목적 :
 1. 국민 사법참여제도 도입 등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사회에서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 선진화 필요
 2. 사회 전반에 걸쳐 법교육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법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
- 주요 사업 : 각종 교재 발간, 학생자치법정, 법교육 강사 제도, 생활법 경시대회,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등

법무부 법교육 추진 종합계획(2005)

1단계 기반구축 05	2단계 참여, 확산 06-07	3단계 정착, 법제화 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참여 확대• 전문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생활 법교육 정착• 법적 기반 구축

법교육지원법

-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8992호로 제정, 같은 해 6월 29일 시행(2007년 11월 14일 이주영 의원 등 17인 발의)
- 법교육 종합 추진계획에서 제안되고 그에 따라 입법 추진
- 2006년 법교육지원법 연구용역 및 초안 작성
- 당시 시민교육지원법안, 인권교육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상황

법교육지원법

- 발의안 :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 포함. (연구용역 안에는 한국법교육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
- 법안심의 과정에서 예산, 인력 등이 소요될 수 있는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설립은 삭제되고, 법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 그 이외 부분은 발의안에 대한 자구수정 정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투표 177, 찬성 171, 반대 1, 기권 5)

소결

- 법교육지원법은 정부 주도 법교육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됨
- 법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조직 등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였으며, 법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다른 정부부처, 국가기관, 변호사협회 등 민간 등과 법교육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교육과정 협의 등)
- 정부 주도 법교육은 많은 실적과 효과를 거둔 면이 있고, 이에 따라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도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소결

- 정부 주도 법교육은 법교육의 목적이 정부의 관심에 따라 마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예, 헌법교육추진단 등)
- 또한 이 때문에 다양한 민간 법교육의 관심을 담아 내기는 어렵고, 시민교육으로 법교육이 가지는 자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나아가 정부 주도 법교육 자체도 민간 법교육 역량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법교육지원법

구성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적

-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1조)
- 평가 : ‘합리적인 법의식’, ‘건전한 민주시민’ 등의 표현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선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의 많은 가치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열거하는 것도 협소한 관점으로 우려가 있음. 그리고 법치주의의 요체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교육을 준법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음

법교육

-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제2조)
- 평가 :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법교육 정의와 유사한 면이 많음. 이 정의 조항 (특히 목적부분)은 앞의 법 제1조 목적 조항과 같음을 빛는 측면이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 : 법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선언적 규정의 역할을 할 뿐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선언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렸음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제4조 제1항)
- 평가 : 심의기구이나 사실상 자문기구에 가깝게 운영되어 있음. 법교육위원회 스스로 안건을 개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 시행령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제6조)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제8조) 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 제6조에서 제9조에는 법교육 연구개발, 학교 법교육 지원, 사회 법교육 지원,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제6조),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제7조)
- 평가 : 그 동안 학회 혹은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온 것이 사실. 향후 독자적인 민간 역량 확보가 관건임

소결

-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됨으로써 많지는 않지만 법 교육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의 근거가 되어 옴.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의 한계로 자안심 한국법교육센터의 예산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음
- 대전의 솔로몬 로파크 설립 이후 부산에 로파크가 설립되었고, 광주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는 등 꾸준히 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도 법교육 지원법이 제도적 근거가 되었기 때문

소결

- 다만 법교육이 시민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콘텐츠 생산이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에 의해 만들어 져야 함. 건전한 시민 보다 비판적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 국가가 직접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제3조 제1항 제4호)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망

개요

-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법무부에서 제2차 법교육추진종합계획안(2010-2014)을 수립함(발표자 참여)
- 특히 제2차 계획안에서는 종합계획의 수월한 시행을 위해 법교육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최근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함(발표자 감수)
- 여기에 법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주요 사항을 망라하고 있어 간단하게 소개함. 발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소결)은 밑줄로 강조함

제2차 법교육추진종합계획안 (2010-2014)

1. 법교육 확산기반 마련

(1) 1단계

- 1) 지역별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확대
- 2) 법문화진흥센터 및 비행예방센터의 역할과 위상 정립
- 3)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연계 4) 기관별 연계 및 법교육 주체의 다양화

(2) 2단계

- 1) 지역 법교육 협의체 구성
- 2) 공중파 방송 등을 활용한 법교육 확산과 홍보작업

(3) 3단계

- 1) 전국단위 민간 법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성
- 2)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시민단체 설립 지원

2. 법교육 대상 확대

(1) 1단계

- 1) 대상별 수요조사 및 기초 자료 연구
- 2) 대상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안정화
- 3)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교육 강화 4) 비행청소년, 교정기관 법교육 강화
- 5)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체제 및 자격 시스템 개발

(2) 2단계

- 1) 성인 대상 시민법교육 강화 2) 직능별 법교육 3) 사회적 소외자 대상 법교육

(3) 3단계

- 1)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3. 법교육 학술기반 강화

(1) 1단계

- 1) 법교육 관련 기초자료 연구 강화 2) 교대, 사범대 법관련 강좌 확대, 필수화
- 3) 연구자료 축적 및 공유 시스템

(2) 2단계

- 1) 법교육 국제 네트워크 구성
- 2) 교대, 사범대 법관련 전문교원 확보 권고 또는 강제 3) 법 교양강좌 확대

(3) 3단계

- 1) 법교육 연구기관 신설

4. 학교 법교육 강화

(1) 1단계

- 1) 학교현장 법교육 담당교사 현황 파악과 문제점 확인
- 2) 법교육 교사 지원 확대
- 3) 전국 법교육 교사 네트워크 구성
- 4) 특별활동/재량활동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2) 2단계

- 1)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클리닉과 학교 연계, 정규화
- 2) 연령단계별 법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
-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체계화

(3) 3단계

- 1)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 2) 법교육과 입시의 연계
- 3) 법교육 시스템 보급 및 확대
- 4) 학생자치법정 제도화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어린이 법교육

가. 유아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 다양한 유아 법교육 자료 개발 보급
- 2) 유아교육 교사 대상 체계적 법교육 연수
- 3) 가정과 연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초등 법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 1) 적극적인 초등 법교육 교재 활용
- 2) 초등 법교육 운영 매뉴얼 재개발 및 내용 개선
- 3) 초등 법교육 행사 범위와 참여 인원 확대 실시
- 4) 초등교사 법교육 연수 확대 5) 초등 법교육 온라인 시스템 정비

청소년 법교육

가. 학교 법교육 지원의 체계화

- 1) 학교 현장과 연계된 법교육 활성화
- 2) 기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3) 대상별, 수준별 법교육 교재 다양화

나. 법교육 담당 교사 대상 지원 다각화

- 1) 법교육 담당 교사 지원 강화
- 2) 교사 대상 법교육 직무연수 강화
- 3) 법교육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다. 학교 밖 법교육 활성화

- 1) 사회소외계층 대상 법교육 확대
- 2)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강화

시민법교육

가. 시민 법교육의 목표 설정

- 1) 민주시민으로서 법의식 함양
- 2) 민주시민의 법적 소양을 기르는 문화 조성

나. 일반시민에게 법에 대한 관심 환기

- 1)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을 자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다. 시민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1) 주제별 · 대상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2) 법교육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라. 시민 법교육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의 체계화

- 1) 법교육 기관 네트워크 강화
- 2) 국가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지원 체계화

취약계층 법교육

가. 새터민 법교육

- 1) 새터민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2) 새터민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수행 및 대상 기관 확대
- 3) 법무부 주최 경연대회에 새터민 전형 신설
- 4) 새터민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대상자의 확대
- 5) 새터민 정착에 있어서 성인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인대상 교육기반 마련

나. 다문화가족 법교육

- 1) 다문화 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수행 및 대상 기관 확대
- 2) 다문화 법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및 교재 개선
- 3) 다문화 법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강의자료 개선 및 개발
- 4) 다문화 법교육 전문강사 확충 및 육성
- 5)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주 대상 교육방향 수립 및 여건구축

다. 장애인 법교육

- 1) 장애인도 다른 법교육 대상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법교육 실시
- 2) 장애아동을 위한 출장강연 확대
- 3) 장애유형별 세부 대상자를 구분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법교육 실시
- 4) 장애발생시기별 법교육 필요

결론

법교육의 의미 재고

- 법은 “사회적 삶의 형식(social forms of life)”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
- 사회적 삶의 형식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가 “실재화(realization)” 되는 “사회적 의식(social consciousness)”을 기반
-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의식은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투영되고 반영
- 한국의 법현실 : 서구에서 수입(계수, Reception)한 사회시스템과 동아시아의 규범문화 사이의 괴리

법교육의 의미 재고

- 法문화 vs. IUS 시스템 : 法문화와 IUS 시스템의 공진화(co-evolution)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 IUS 시스템의 맥락적 체계적 이해가 전제
- 서구에서 법교육이 갖는 의미와 서구 법시스템을 계수한 우리 현실에서 법교육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음
-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법체계가 담고 있는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법의 기능과 현실적인 역할은 비판적으로 조망되어야 함

법교육의 의미 재고

- 5가지 핵심 주제
 1. 법(IUS)의 다의성 : 옳음, 법, 권리 - 법은 옳음을 항상 묻는다
 2. IUS Naturale(자연법) : 상위법(higher law) - 실정법은 항상 평가되어야 한다
 3. IUS의 지배 : 법치주의 - 법의 지배는 준법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제한이다
 4. IUSTITIA : 정의, 공동체와 분배 - 정의는 사회의 구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IUS적 물음에서 비롯된다
 5. 동아시아에 없는 법형식으로서 "헌법" - 헌법은 위 모든 것의 표현형이며, 우리가 문화적으로 체화해야 할 대상이다

비판적 시민

- 비판적 시민은
- 법이 우리 공동의 삶의 형식임을 이해하고, 그 법이 삶을 개선하고 서로 존중 받는 삶을 위한 공존의 조건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실정법(판례 포함)을 항상 평가하려는 자세와 역량을 보유하고, 현실 실정법을 개선하는 입법 과정을 포함한 법적 공론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민

비판적 시민을 위한 법교육

- 생활 법교육에서 가치 법교육으로 : 법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득력(literacy)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함양해야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
 1. 국가 교육과정의 개편과 이를 위한 대안 교육과정의 개발
 2. 법교육지원법은 시민교육, 인권교육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법교육 연구자의 미래를 위해

- 법교육의 학술적 지위 공고화를 위한 연구자 역량 및 저변 확대
- 현실적으로 법교육 연구자들의 연구직 마련 방안 필요(교대, 사범대 등에 교원 확보 및 강의 자리 확보, 법교육연구기관 설립 모색 등)
- 법교육 연구자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학회 일원화 등) 및 관련 인접 학문 연구자와 공동, 융합 연구 진행
-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법교육 주제(화두)의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론 모색

감사합니다

● ● 발제 2 ● ●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발제 2]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김갑석(대구대강사, 법학박사)

I. 서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적 성장을 빠르게 이룬 반면,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문제와 노사갈등, 사회적 양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시민들의 법의식이 준수로 연결된다. 시민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법교육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2005년 3월 법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법교육추진기획단과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법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 기반구축을, 2단계에서 참여확산을, 3단계에서는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¹⁾ 기반구축단계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산하에 법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고, 법교육 교재로 한국인의 법과생활과 청소년의 법과생활을 발간하였다. 참여확산단계에서 법교육출장강연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법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법교육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²⁾

「법교육지원법」은 2008년 이주영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교육지원법은 “첫째, 2005년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선진 법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확대해 왔으나, 법제도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전 국민적인

1) 법무부의 3단계 5개년 법교육 종합발전 계획의 자세한 것은 윤일중,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8.6, 166면 이하 참조.

2) 이대성, 법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09, 66-67면 참조.

확산이 어렵고, 둘째, 현재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교육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교육분야 중 하나인 법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기존 교육기관은 관련 전문 인력과 경험이 전무하여 자체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민간 법교육 활동의 미비로 법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³⁾ 또한, 「법교육지원법」은 미국의 1978년 법교육지원법을 모델로 하여 법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⁴⁾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8년 3월 28일에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된 시점에서 이 법이 법교육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먼저, 법교육지원법상 법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친 법조항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법교육 실천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살펴본 후, 법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II. 법교육지원법과 법교육 실천

1.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었다(법 제4조). 심의 사항으로는 첫째,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둘째,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법교육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다. 또한, 법교육위원회는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한다. 법교육위

3)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법교육지원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8.2.(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순원,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과교육 제50권 제4호, 2011.12, 91면 참조.

4) 조진우,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6권 제4호,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6.12, 154면.

원회는 법교육 실천에 있어 법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법문화진흥센터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법 제5조). 주요업무는 ①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②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③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④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⑤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실천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교육의 법교육전문강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민간기관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3.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

법교육 실천에 있어 프로그램은 주로 법교육 교재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로운 법교육프로그램은 법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다(법 제6조, 시행령 제15조). 특히, 법교육 실천의 초기단계에서는 법교육교재의 개발은 곧 법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교육 실천의 활성화는 법교육 교재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4. 학교 법교육의 지원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이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학교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을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법교

육 활동 및 자치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법교육의 실천 중 학교 법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5. 사회 법교육의 지원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사회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법교육의 목적인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어 큰 범위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법교육이다.

III. 법교육지원법과 법교육의 실천의 활성화

1. 법문화진흥센터 증대

현재 법무부에서 지정한 법문화진흥센터는 8개의 민간기관과 72개의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은 1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56개의 준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⁵⁾ 민간기관으로는 한국법교육센터를 비롯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등이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는 대전 및 부산 솔로몬로파크 등이 있다.⁶⁾

5) 법무부 보호관찰과, 법무부 보도자료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 지역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간다”, 2016.9.22.; 법무부 보호정책과 자료제공.

초기의 법문화진흥센터는 2010년 3개의 법무부 소속기관(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과 3개의 민간기관(한국법교육센터, 한국사법교육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준법지원센터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면서 전체 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직접진행해 오던 법교육출장강연에 대한 업무가 준법지원센터의 업무로 가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국의 법교육출장강연을 위해 법교육전문강사(LAW EDUCATOR)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촉하여 법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업무가 각 지역의 준법지원센터로 가면서 지역의 법교육전문강사의 원활한 법교육이 진행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 중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솔로몬로파크이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인 솔로몬로파크는 2008년에 개청되었다.⁷⁾ 솔로몬로파크는 국내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시민이 함께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연수로는 어린이 법탐험 캠프, 중학생 법사랑 캠프,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교사직무연수, 법사랑위원신임교육, 소년보호위원 전문교육, 법나들이 캠프, 주부로스쿨 등이 실시된다. 특히, 법나들이 캠프는 보호자와 어린이(3,4학년)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로서 법을 가족과 함께 배우고 즐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부산에도 부산솔로몬로파크가 개청되었다. 대전지역에만 유일하게 있던 솔로몬로파크가 부산에도 개청되어 부산, 경남, 경북 등의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법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는 [표1]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등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과 관련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법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질서 실천운동의 지원을 법교육 업무로 한다.⁸⁾

6)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2.12.31.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453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7) 이하 대전솔로몬로파크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http://solomondj.lawnorder.go.kr>).

8)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http://law.lawnorder.go.kr/page/program/lawcenter01>)

;준법지원센터는 이 외에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조사, 전자감독 등의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호관찰소와 복수 명칭사용하고 있음.

<표1>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⁹⁾

업무	내용
찾아가는 교육현장 출장 법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대상, 교사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대상, 교사대상) 배려질서교육 (학생대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센터방문 진로체험 또는 학교방문형 진로체험 선택 가능
법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학생자치법정, 법사랑학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법무부 법교육 경연대회 개최 지원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경연대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헌법토론 대회, 우수강의안 경연대회 개최 등 지원
시민로스쿨, 법률콘서트 개최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시민로스쿨 및 법률콘서트 등 개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보호관찰 청소년,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교육을 실시
무료법률상담	공익법무관, 마을변호사 등과 함께 무료 법률상담 시행
솔로몬 로파크 체험 지원	대전, 부산의 법교육 체험시설인 법무부 솔로몬파크 체험 지원
법무부 쉼테드, 준법쉼테드 시행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전국 25개 지역 쉼테드 유지, 관리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지역 확산	지역특성에 맞는 배려실천 주제를 선정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실천운동 추진

민간기간인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교재개발을 비롯하여, 학생자치법정을 비롯하여 법무부의 각종 법교육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¹⁰⁾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생활법률강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한부모가정을 위한 출장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¹¹⁾ 한국사법교육원은 시민로스쿨과 법사랑위원 전문화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¹²⁾ 그 외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http://law.lawnorder.go.kr/page/program/lawcenter01>).

10) 박상준,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013.4, 76면;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lawedu.or.kr/main.php>).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http://lawhome.or.kr/newhome/sub05/body04.asp#1>).

12) 한국사법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je.or.kr/>).

2. 법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법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법문화진흥센터가 전국에 잘 자리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시하는 법교육프로그램이 없으면 법교육은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특히 법교육을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법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도 바로 법교육의 프로그램들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은 <표2>와 같다.

<표2> 대상별 법교육프로그램 종류¹³⁾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고교생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만들기,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중학생 생활법 퀴즈·캠프대회, ㉥고교생 생활법 동아리 경연대회, ㉦법교육출장강연,
교사 및 강사	㉧우수강의안 교수방법 경연대회, ㉨교사직무연수
일반시민	㉩시민로스쿨, ㉪주부로스쿨, ㉫법률콘서트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높은 참여도를 가진다. 이렇게 참여도가 많은 프로그램으로는 법교육출장강연 중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있다. 이는 모두 학교에서 진행되는 법무부의 학교 법교육이다.¹⁴⁾ 먼저,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를 규정¹⁵⁾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 법교육출장강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의 학교에서 법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법교육출장강연은 법교육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판사, 검사를 비롯한 법

13)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https://law.lawnorder.go.kr>)에서 자료인용.

14) 법무부의 학교 법교육에 대해서는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09, 13-17면 참조.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인파, 법학교수, 법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전문강사가 법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법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법무부는 법교육출장강연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초등학생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받음에 있어 맞춤형 법교육이 될 수 있었다. 법교육출장강연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있다.

<표3> 법교육 출장강연 출장현황 및 청강자 수¹⁶⁾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법교육 출장강연	596,923명 (2,346회)	347,180명 (2,222회)	480,170명 (2,988회)	777,382명 (5,547회)	1,175,705명 (10,301회)	355,881명 (4,969회)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칙적용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또래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성을 이유로 학생자치법정의 경우에도 2006년 전국 5개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¹⁷⁾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참여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에서 1,720개교가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4> 년도별 학생자치법정 참여 학교수¹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	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1,139	1,030

고교생헌법토론대회를 비롯하여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 함양을 위한 법체험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법을 퀴즈쇼와 연극, 토론, 동아리 모임 형태로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교육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6) 법무부 보호정책과 자료제공.

17) 윤일중, 전개논문, 172면.

18) 법무부 보호정책과 자료제공.

우수강의안 교수방법 경연대회는 법교육의 질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해 교사들에게 효과적 교수방법 습득 등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간의 정보 공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법질서준수, 인권교육, 배려실천, 스포츠 법교육,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아동학대, 진로체험교육, 교권침해예방, 사이버범죄예방, 탈북·다문화 법교육 등의 다양한 주제의 법교육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강의안과 강연자가 배출된다.¹⁹⁾

주부로스쿨, 시민로스쿨, 법률콘서트 등의 시민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법으로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민로스쿨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기관이 연계하여 각 시·도, 시·군·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법교육 강좌이고, 주부로스쿨은 솔로몬로파크에서 지역사회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상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는 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기 쉬운 생활법률, 함께 해보는 부동산 등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로교통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⁰⁾

법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전국의 도서 벽지의 일반 시민에게 버스로 구성된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3. 법교육 교재의 활성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후 법교육 교재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법교육 교재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발맞추어 개발되었기에 법교육 프로그램과 법교육 교재는 함께 성장하였다. 특히, 솔로몬로파크와 같은 법연수시설에서는 대상별 법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대상별 법교육 교재를 제작하였다. 뿐만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맞춤 법교육 교재,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등의 교재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또한 한국인의 법과생활과 청소년의 법과생활이라는 법교육의 기본서에 해당하는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법교육이 대학 법교육에 까지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새로이 법교육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영역의 스포츠 법교육의 교재도 많이 개발되었다.

19)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https://law.lawnorder.go.kr>)에서 자료인용.

20)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법무부, 15면.

4. 취약계층의 법교육의 활성화

법교육지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도 활성화 되었다. 먼저, 새터민 법교육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하늘꿈학교 등 새터민 대상 5개교에서 법교육 강좌가 운영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교육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재학생, 교사 등을 위한 ‘우리법 바로 알기’ 프로그램 및 체험형 법교육도 실시되었다.²¹⁾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과 장애인, 노인 법교육도 진행되었다.²²⁾

5. 법교육의 다양화

법교육에 관한 정책방향과 기본계획 등은 법무부 소속인 법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법교육은 법무부가 주도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교육지원법 제1조에 “국민들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의1에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고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교육을 하는 주체는 다양함을 의미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기관에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명칭이 “법교육”이 아닐 지라도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법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현재, 국회에서는 법교육의 한 분야인 국회에서의 입법체험을 하는 “어린이국회”를 운영하고 있다.²⁴⁾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역할과 재판의 종류,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쉽고 재미있는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된 법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있다.²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1) 법무부, 상계자료, 18면.

22) 다문화 법교육과 장애인, 노인 법교육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계자료, 14면 참조.

23)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법교육의 현황에 대해서는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121호, 2010, 12, 50-57면 참조.

24) 대한민국어린이국회 홈페이지(<http://child.assembly.go.kr/child/main/childMain/main.do>).

25)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

는 권역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상별 사이버 인권교육과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²⁶⁾ 법제처에서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법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²⁷⁾ 특히 어린이 법제관 법안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교육과 양성평등,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²⁸⁾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스포츠인권교육(폭력, 성폭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²⁹⁾

IV. 법교육 실천에 있어서의 과제

1.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증가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법교육의 양적인 증가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법교육의 양적 증가를 대변한다. 하지만 법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교육이 실시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법교육 전문가로서 9년째 활동하고 있는 발표자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법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이다. 특히, 각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내용면이나 환경면에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특별한 개선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지원법에서 제6조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법교육 전문가들이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³⁰⁾ 특히, 세부적인 법관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질 높은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의 조성이 되어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6)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27)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

28) 허종렬, 전개논문, 56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index.do>).

2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sports-in.sports.or.kr/>).

30) 김자영·곽한영,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법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7.4, 45면.

2.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관리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여 수정 가능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법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전무하다. 법교육은 개발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법교육은 변화하는 교육의 상황에 맞추고 현실성 있는 법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공감하지 않는 법교육은 법교육이 아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해결해야 법교육의 완성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교재의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개정되는 법을 반영하기 위해 법의 개정에 맞추어 새로운 개정판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3. 법교육강사의 전문성 강화

법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시민들은 보통 법을 지루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때문에 법교육을 강의하는 강사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법률의 전문가이거나 교육의 전문가이기 보다는 법률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법문화진흥센터에 법교육 전문가의 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법교육 체험과 연수가 상시 진행되고 있는 대전, 부산 솔로몬로파크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교육 전문가가 없다. 수많은 법교육을 외부의 전문강사와 직원들로만 진행하고 있다. 법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법문화진흥센터에 법교육교수진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전보다 시민들의 법의식은 높아졌고, 학교교육에서도 법교육의 위치는 높아졌다. 이렇게 법교육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공은 바로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법교육위원회가 지정한 법문화진흥센터이다.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

램을 진행하였고, 법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학생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교육은 양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장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교육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바로 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다. 법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법교육 과제의 해결에도 그 방향을 잡게 된다.

법교육을 “법의식을 향상하는 교육”과 “법지식을 잘 전달하자는 교육”으로 나누어 본다면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는 법교육의 방향을 법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법정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중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법교육에 있어 사실 이 두가지는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법교육 현장에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둘 중 한가지에 중점을 두는 방법을 선택해서 법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 법의식을 향상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법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법의식이 낮으면 법질서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즉, 법정보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법의식이 발달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법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의식의 향상이고, 이는 곧 준법의식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이에 법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은 법의식을 향상하는 교육을 위해 법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법의식을 향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재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교육 강사 또한 법의식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자의 이런 생각은 법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교육은 법적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법의식을 향상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경험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법교육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법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경험적 판단에 그 근거를 둔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자영·곽한영,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법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7.4.
- 박상준,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013.4.
-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09.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 윤일중,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8.6.
- 이대성, 법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09.
- 정순원,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과교육 제50권 제4호, 2011.12.
- 조진우,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6권 제4호,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6.12.
-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121호, 2010, 12.

2. 인터넷 사이트

- 대전솔로몬로파크(<http://solomondj.lawnorder.go.kr>).
- 대한민국어린이국회(<http://child.assembly.go.kr/child/main/childMain/main.do>)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https://sports-in.sports.or.kr/>)
- 법무부 보호정책과(<https://law.lawnorder.go.kr>)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
- 어린이법제처(<http://www.moleg.go.kr/child/>)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index.do>)
-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newhome/sub05/body04.asp#1>)
- 한국법교육센터(<http://www.lawedu.or.kr/main.php>)
- 한국사법교육원(<http://www.kije.or.kr/>)